

한 해 800명 '공무원범죄'...경찰, 1위

범죄에 가담한 국가공무원이 한 해 8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국가·지방·교육청 등으로 나뉘는데, 국가공무원은 중앙자치단체에 소속돼 일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들은 정부청사와 국회 의사당, 경찰서, 대법원, 공립학교 등에서 각종 인·허가 및 기타 공무를 맡고 있다.

26일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공무원범죄(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수뢰 등 혐의)를 일으킨 국가공무원은 총 824명이다. 지방경찰청(경찰청) 소속이 47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법무부(137명), 국세청(34명), 교육부(2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공무원범죄는 2013년 624명에서 2017년 824명으로 늘어났다. 범행에 연루된 국가공무원의 소속 기관별로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해마다 1, 2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국세청과 교육부에 소속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비단 절대적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 가운데 국가공무원이 저지른 공무원범죄 비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공무원범죄 비율은 2013년 30.9%(2020명 중 624명)에서 2017년 42%(1900명 중 824명)로 상승했다.

때문에 '나랏일'을 하는 자리인 만큼 공무원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정 경기도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하루라도 허가를 내줄 게 많은, 이권이 몰려있는 부서가 범죄에 연루될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며 "직위와 연관된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 부처에서 부정부패나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많다는 건 신뢰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적 기대가 높은 직업"이라며 "이는 기강해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관별 소속 인원의 차이는 감안해야 할 점이다.

이 교수는 "(경찰의 경우) 분모가 크다 보니 건수에서 최대를 기록한 것"이라면서도 "(국가공무원 내 공무원범죄 상위 분포와 관련) 직업의 특성상 더 낮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 통계연보"와 복수 기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경찰청 소속 인원은 12만6000여명에 달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범죄 저지른 국가공무원 행정부 내 소속·정부청사와 국회·경찰서 등 근무 2013년 624건→17년 824건...공무원 내 비율도 ↑

한다. 법무부는 2만2000여명, 과학통신기술부는 3만2000여명, 국세청은 2만명 가량이다. 교육부의 경우 각 국립 학교 교원 등을 포함할 경우 2만6000여명이다.

한편 2017년 기준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공무원 범죄자)의 수는 1만3310명으로, 이 중 국가공무원은 3926명(약 29.5%)이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7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464명)와 교육부(339명), 과학통신기술정보통신부(334명), 국세청(18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소속 기관 인원 대비 공무원 범죄자의 비율을 따져보면 대략 법무부 2.1%, 경찰청 1.4%, 교육부 1.3%, 과학통신기술정보통신부 1%, 국세청 0.9% 등이다.

뉴스시



분필낙서 추억속으로 골목낙서 놀이마당 행사가 열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어린이들이 추억의 분필낙서 체험을 하고 있다.

'글꼴 저작권 분쟁' 광주·전남 교육계 긴장

컴퓨터 문서작성에 사용되는 '글꼴'(폰트)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광주·전남 교육계도 송사로 이어질까 노심조사하고 있다.

24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교육지원청과 공·사립 학교로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등을 묻는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본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아직 없지만, 내용증명이 연이어 도착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소송제기는 시간문제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빚어지는 있는 '글꼴 소송전'과 유사한 형태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글꼴 저작권 보유업체 3~4곳은 최근 광주와 전남은 물론 서울지역 사립학교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글꼴이 불법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 금액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그 가운데 윤디자인 측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당 200만원의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앞서 2016년에는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대법 승소 판결까지 받아낸 상태다.

이러한 광주나 전남지역 학교를 상대로 한 윤디자인 측의 문제제기는 없는 상태이지만, 수도권 소송이 마무리되면 언제든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윤디자인을 비롯한 일부 업체들은 전국 17개 시·도의 글꼴 저작권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제증명작업을 진행중이어서 이 상태로라면 교육당국의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학교별 라이선스 비용이 20만원에서 250만원에 달해 전국적으로는 수백억원, 광주·전남만 놓고 보

라도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전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학교 컴퓨터로 특정 서체를 사용했는지, 대체글꼴이 사용된 데 대한 해석 논란, 라이선스 대상 교육용 글꼴 패키지가 수백종에 달해 특정 글꼴만 꼭 짚어 문제삼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상황여서 사전 협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소송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역 교육계와 일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은 물론 교육자료, 외주 제작 인쇄물까지 저작권 위반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특정 글꼴을 사용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일부 학교만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이지만 업체 측이 학교 홈페이지를 일일이 조사할 경우 저작권 위반 사례가 더 발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학교들이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교육부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조인호·김정환 기자

美여성, 하와이서 실종 17일만에 구조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자연 보호구역에서 실종된 미국인 여성 등산객이 실종 17일만에 구조됐다. 이 여성은 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하와이뉴스온 등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겸 요가 강사인 아만다 엘러(36·여)는 지난 8일 등산객과 자전거 여행자에게 인기가 많은 마우이섬 북쪽 마카와오 자연보호구역에서 산책을 하다 길을 잃었다.

그는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려고 시도 했지만 의도와 달리 계곡과 암석, 양치류 등으로 둘러싸인 자연 보호구역 중심부로 더 깊이 들어갔다. 당시 소지품은 그가 입고 있던 탱크탑 상의에 8부 같이 요가 바지가 전부였다.

물병과 휴대전화, 지갑 등 생존과 외부에 연락을 위해 필요한 물품은 모두 차에 있었다. 엘러의 가족은 소지품 대부분 차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에서 납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엘러는 비가 자주 내려 습하고 하루 온도가 극심한 이 곳에서 생존하고자 기온이 떨어지는 밤이면 양치류와 나무 잎사귀 등 인근에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몸을 덮었다. 때로는 멧돼지풀과 진흙 속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야생 딸기부터 벨레까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었다. 엘러는 "내가 너무 말라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어느 순간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다기 시작했다. 앞도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엘러는 7m 미터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가 다치고, 갑작스런 홍수에 휩쓸려 신발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엘러는 자신을 구하고 자 출동한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여러차례 구조를 요청했지만 지내지 않고 한다.

하지만 그는 실종 17일째 되던 날인 24일, 막을 것과 잠잘 장소를 찾아 개울 근처를 맴돌던 중 수색을 끝내고 돌아가던 헬리콥터 승무원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엘러가 발견된 장소는 자신의 차에서 7마일(11km) 떨어진 곳이다. 60명에 달하는 구조대는 당초 1.5마일 주변을 집중 수색했다. 엘러는 구조 직후 "모든 사람들에게 값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말했다.

프랑스서 102세 할머니가 92세 노인 살해

102세의 한 여성이 프랑스 북부 셰지슈흐마흐느에 있는 한 주택가 요양원에서 92세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CNN보도에 따르면 이날 자정(현지시간)이 넘는 시간에 셰지슈흐마흐느에 있는 요양원에서 한 간병인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누워있는 92세의 여성을 발견하고 응급구조대에 신고했다.

프랑스 북부 수아송 고등법원에 따르면 92세 여성의 얼굴이 눈에 띄게 부어있었고, 부검 결과 사인이 질식사로 밝혀졌다.

이 피해자는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맞은 후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법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에베레스트 올봄 등반시즌에 17명 사망

세계최고봉 에베레스트에서 약 1주일동안 등반가 10명이 사망하면서, 네팔과 티베트 당국의 등반허가 발급 문제가 다시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BBC는 25일 영국인 로빈 해인스 피셔가 이날 오전 하산하던 중 정상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탈진해 쓰러져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등반했던 셰르파에 따르면, 피셔는 정상을 밟은 지 약 45분만에 숨졌다.

전날에는 아일랜드인 케빈 하인스가 에베레스트 등반 중 사망했다. 하인스는 티베트 쪽에서 오르기 시작해 정상을 밟지 못하고 해발 7000m 지점의 캠프로 돌아오다가 숨졌다.

앞서 이번 주에만 인도인 4명, 네팔인 1명, 오스트리아인 1명, 미국인 1명이 사망했고, 전 주에는 아일랜드인 1명이 등반 중 추락해 사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올 봄 시즌 사망자가 총 17명에 달한다며, 이는 수십년래 최악의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BBC와 NYT는 올 봄 시즌에 네팔이 1인당 1만1000달러(약307만원)를 받고 381명에게 등반허가를 내줬다면서, 이로 인해 최근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의 '힐러리 스텝' 또는 '데드 존(Dead Zone)'으로 불리는 약령높은 '빙목구간'을 통과하는데 수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또 올봄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사람이 지난해 807명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검진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